

종합

광주일보 등 지방신문협
종편 공동 참여키로

광주일보 등 지방신문들이 종합 편성채널 사업 참여 행보의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열어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으로 참여키로 하고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광주일보사를 비롯, 강원일보와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9개사다. 앞서 지방신문협회는 지난 9월 임시총회에서 종편 참여를 결의한 데 이어 지난 8일 실무태스크포스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마쳤다. /최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포스코 돛구장 제안서 28일 제출

광주시 전문가·민간인 참여 심의위 구성키로

시의회도 특위 설치 돛구장 논의 본격화될 듯

광주시에 돛구장 건립을 추진하는 포스코 건설이 오는 28일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시의회가 돛구장 건설특별위원회를 금명간 발족할 방침이어서 돛구장 건설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11일 “포스코건설 측이 오는 28일께 돛구장과 부대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제안서를 시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광태 광주시장은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포스코 측이 MOU체결전 골프장 인가, 워터파크 운영, 수익용 임대 아파트 수천세대 분양권을 인센티

브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요구 사항이 제안서에 그대로 담기지, 추가 문서사항이 있을 지 관심이다. 광주시는 일단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 ‘돛구장 건설 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학계, 체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속한 전문가와 민간인들이 참여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내년 2월께 돛구장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시는 의회 심의 과정을 거치고 시민여론 조사도 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마산-창원-진해시
행정구역 통합 확정

경남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자율 통합이 사실상 확정됐다. 창원시의회는 1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시의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출석해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마산, 창원, 진해시 통합안에 대한 찬반의견 제출’ 안건을 상정, 의원 투표를 거쳐 찬성 15명, 반대 4명으로 찬성의결했다. 지난 7일 마산시와 진해시의회가 통합안에 찬성하는데 이어 창원시의회까지 찬성함에 따라 3개 시 통합은 사실상 확정됐다. 통합은 내년 7월 중에 이뤄지며, 통합시는 인구 108만, 지역총생산 21조 7천억원에 육박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에 오르게 된다. 오는 14일 경남도의회가 3개 시 통합안에 대한 찬반의견 안건을 다룰 예정이지만 이미 당사자적인 3개 시의회가 모두 찬성함에 따라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창원마산진해시(가칭) 설치법’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창원과 마산, 진해시의회 의원 동수로 구성되는 ‘통합준비위원회’도 발족시켜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지역발전 방안, 지원 재원 활용방안 등을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흡연 안돼요” 11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에서 열린 ‘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 캠페인’에서 학생들이 CO(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이용해 일산화탄소 양을 재고 있다. 이날 행사는 북구보건소 주최로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北 외무성 “6자 재개 공감...美와 차이점 좁히려 노력”

북한은 11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미국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기간 “실무적이고 솔직한 논의

를 통해 쌍방이 상호 이해를 깊이 했으며 서로의 견해를 좁히고 공통점도 적지 않게 찾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6자회담 재개 필요성과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해 일련의 공동 인식이 이뤄졌다”며 “조미(북미) 쌍방은 남아있는 차이점들을 좁히기 위해 앞으로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보즈워스 대표가 방북 직후 열린 회견에서 한 발언과 거의 유사하다. 보즈워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프로세스 및 9.19 공동성명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복구할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는 6자 당사자간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통일부 “타미플루 분배 투명성 확보, 복측과 협의”

통일부는 11일 북한에 타미플루 50만명분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 “지원의 목적에 맞게 분배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복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형태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분배 투명성은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분배투명성의 정도

나 분배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원하는 품목이나 전달되는 절차 등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분배투명성이 어느 지원에서나 중요하지만 타미플루의 경우 다른 대북지원품과 달리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 외에는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시설

단체장 비리로 위기 맞은 ‘풀뿌리 민주주의’

전남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초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과 각종 비리 혐의로 중도 하차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당선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0명의 15.7%인 36명이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으며 전남이 8명으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전남의 경우 시장·군수 3명 중 1명 꼴로 중도 사퇴한 셈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부끄럽다 못해 수처시도 부합개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포스코건설은 돛구장을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돛구장 주변에는 스포츠·관광·레저 시설이 들어서는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석에 따른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1개 선거구당 수 억원의 혈세가 탕진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풀뿌리 단체장의 범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역민들의 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돈 안 드는 선거문화’ 정착과 권한 분산이 단체장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다. 막대한 돈을 쓰고 당선된 공직자는 본전 생각이나 차기 선거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중앙감 등으로 쉽게 비리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여기에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행사가 뇌물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초 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초 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체장 권한을 분산시키고 독립적인 특별감사기구도 상시 가동해야 한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 근본 해결책 없나

미분양 주택 가운데 팔릴 가능성이 적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광주·전남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미분양 아파트 10 세대 가운데 약성이 6~7세대에 이르고 있어 주택건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10월 말 현재 광주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3천740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미분양 아파트의 65% 수준으로 1년 전에 비해 32.2%나 늘었다. 전남의 사정은 더 심하다. 전체 미분양 물량 5천677세대의 75%인 3천802세대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이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을 늦춰왔던 주택업계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 계획인데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

트 양도에 면제를 내던 2월까지만 시행키로 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마구잡이 태세다. 악성 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방주택경기는 거의 빈사상태다. 특히 지역경제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중견 건설업체들이 속속 도산하거나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할 때 주택 경기를 살리고 있는 지역 경제 회생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때까지이라도 연기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토지구획공사 등에서 구입해 보다 싼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 주택경기의 물량은 정부의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명숙 대책위 ‘피의사실 공표’ 검찰 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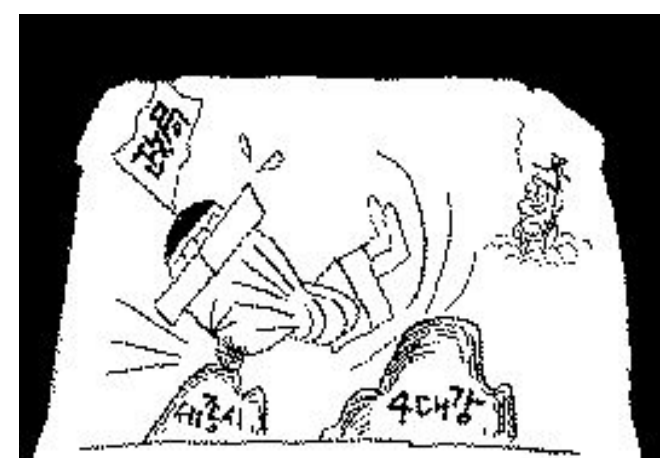
檢 “법 절차 따라 수사”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한 전 총리가 광역육 전 대통령에 사정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11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진을 고발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피의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인데다 매우 악의적”이라며 “이를 내버려두면 법치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의 사회적·정치적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사 내용에 비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외에 다른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발인을 검사 1명~수명으로 적었다. 고발인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한 전 총리는 “허위의 기사를 작성,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만 달러 수사’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사와 이 회사 기자 2명,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원을 연대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검찰이 근거 없이 원고를 불법 정치자금 받은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낙인찍고서 허위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려주고, 언론은 또 이를 받아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주현 중앙지검 3차장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수사절차에 위배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한걸음 내딛기가 힘든 상황

우즈 “결혼 유지 위해 골프 포기할 수도”

‘골프 황제’에서 ‘불륜황제’로 전락한 타이거 우즈(33)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골프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은 11일 우즈가 불륜 사실이 불거진 이후 집을 나간 아내 엘린 노그데그린(29)에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골프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엘린은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즈에게 “골프와 자신 중 둘의 하나를 고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린은 또 우즈에게 결혼 유지를 위해 앞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타이거 우즈는 현재까지 두 명의 포르노 배우



를 포함해 적어도 10명의 여인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는 하지만 불륜 과정에서 피임을 하지 않아 혼외 자식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임신한 불륜녀에게 거액을 줬다는 소식으로 돌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한편, 뉴욕데일리뉴스는 이날 연예주간지 ‘피플’의 보도를 인용해 우즈의 부인 엘린 노그데그린(29)이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檢 現경병 의원 소환

골프장 대표에 1억 수뢰 혐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을 11일 오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힐서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각종 혐의를 추궁했다. 현 의원은 이 골프장의 회장 공도(43.구속기소)씨에게 먼저 돈을 요구해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혐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